

第236回國會
(臨時會·閉會中)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3月18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추천의건
2. 소위원회위원개선의건
 - 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개선의건
 - 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개선의건
 - 다.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개선의건
3. 현안보고
 -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審査된案件

- | | |
|--------------------------|---|
|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추천의건 | 2 |
| 2. 소위원회위원개선의건 | 2 |
| 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개선의건 | |
| 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개선의건 | |
| 다.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개선의건 | |
| 3. 현안보고 | 2 |
|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

(14시16분 개의)

○**委員長 尹榮卓**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丘冀盛**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尹榮卓** 방금 입법조사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金花中 위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함에 따라 동 교섭단체 소속 崔榮熙 위원이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崔榮熙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榮熙 委員** 尹榮卓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약 35년 동안 교육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또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여러 교육부 국장님과 더불어 열심히 국정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의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되신 尹德弘 교육부총리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양한 교육경험과 개혁성을 높이 평가받은 신임 교육부총리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이번 인선과정을 통해 깊이 인식했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교육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 중에는 그 뿌리가 깊고 또한 매우 복잡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어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하다가 또 다른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실패사례에서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이런 실패사례들을 교훈삼아 성공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주실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기로 한 것은 교육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하신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서울대학교 공익법인화, 학제개편, 교육행정정보시스템화의 운영문제 등 매우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개인적 수준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파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과 교육관계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소신과 교육철학을 직접 확인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오늘 회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추천의견

(14시20분)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추천의견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金花中 위원의 의원직 사직으로 인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자격 상실로 위원 1인을 다시 추천하려는 것으로서 민주당에서 요청한 대로 崔榮熙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위원개선건의

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개선건의

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개선건의

다.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개선건의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위원개선건의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金花中 위원의 의원직 사직으로 인해 공석이 된 소위 위원을 새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대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李美卿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崔榮熙 위원을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안보고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14시22분)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尹德弘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尹德弘입니다.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로서 오늘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교육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崔榮熙 위원님께서 새로 교육위원으로 오신 것을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교육과 관련하여 시대적 요청에 따른 많은 개혁방향과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우리 부에서도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하여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과 교육정보화사업 및 각종 교육지원체제의 개선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 등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바탕에서 참여와 자치,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따

른 교육개혁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소리가 교육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권한을 과감히 위임·이양하는 한편, 지원·서비스 및 평가체제의 확립과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총괄·조정예 주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우리 부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여러 관계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연수 및 지원체제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WTO 교육개방 요구와 관련해서는 교육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고 국내외의 개방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 내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하여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현행 대입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5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이전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현장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현안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李基雨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에 앞서 2003년 3월 11일 정부인사로 부임한 우리 부의 차관과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徐凡錫 차관입니다.

高在邦 차관보입니다.

李基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李修一 학교정책실장입니다.

鄭奉根 인적자원정책국장입니다.

金永植 평생직업교육국장입니다.

張基元 대학지원국장입니다.

金坪洙 교육자치지원국장입니다.

柳宣圭 공보관입니다.

金洪鎭 감사관입니다.

金正基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입니다.

李英萬 교원정책심의관입니다.

金東玉 비서실장입니다.

李鍾洹 총무과장입니다.

鄭鳳燮 학교정책기획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李在五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부총리와 차관이 새로 오셔서 오늘 첫 상임위원회인데 부총리와 차관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우리 위원들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적사항을 알아야 질의를 하든지 하지, 그것을 왜 안 줘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지금까지는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해 드리지는 않았습니 다. 다만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李在五 委員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부총 리와 차관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인사기록카드 가 아니면 이력서라도 교육부에 보관되어 있는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예, 그렇 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준비하는 동안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昌達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안업무 보고할 순서지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예, 그렇 습니다.

○朴昌達 委員 이것 우리가 의원실에서 다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질의시 간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현안업무보고는 생략 하고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다 보 고 왔는데 또 들으면 뭐합니까? 한 번 물어보시 고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尹榮卓 대충 아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예, 그렇 게 하겠습니다.

朴昌達 위원님께서 자료를 사전에 보았으니까 보고를 생략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략 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3건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착에 대해서는 1쪽을 생략 하고 3쪽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EIS 운영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되어 있습

니다.

교직단체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교총과 한교조는 NEIS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교총은 여건 완비 후에 시행을 요청하고 한교조는 NEIS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인권침해 및 교원통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2개 일반교육행정은 NEIS로 운영하되 교무·학사업무 등 5개 업무는 종전 CS시스템 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부모단체는 학부모서비스, 민원서비스는 확대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NEIS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IT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3월 21일 이내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교사 연수 및 지원체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WTO 교육서비스 협상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관계자 간의 의견 상충으로 최초 양허 수준에 대한 합의 도출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찬성론이 있는가 하면 반대론이 있습니다. 특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작년 10월에 결성되고 나서 협상에서 교육 부문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양허안 제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의 개방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양허안은 최대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올 3월 말까지 제출할 최초 양허안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서 초·중등 교육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부문에서의 최초 양허안 수준 및 범위는 국내외의 개방에 대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수렴해서 부총리님께서 결정하시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학입학전형의 안정적 시행여건 조성입니다.

2004년도 대입전형은 이미 작년 8월에 2004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대입정책이나 방향과 동

일하고 현행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대교협에서 199개 대학의 2004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집계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5학년도 대입전형은 제7차 교육과정을 반영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2001년 12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내용 중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영역은 학생들의 자율 선택사항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수시 1학기 모집 확대에 따른 고등학교 현장의 합격자에 대한 지도가 곤란하다는 것 또 수능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한 논란이라든지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2005학년도 수능시험 표준점수에 대한 산출, 영역별 균형배점 등과 선택유형 다양화에 따른 시행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고등학교 현장의 합격자 지도곤란과 관련해서는 수시합격자에 대한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또 소수점 위주의 수능시험 배점체제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평가원으로 하여금 3월 말경에 2004년 수능시험 세부시행계획 발표 시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에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12월에는 수능예비평가를 통해서 2005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199개 대학별로 세부적인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집계해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李基雨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李美卿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美卿 委員 李美卿 위원입니다.

먼저 尹德弘 부총리님, 교육인적자원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먼저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총리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텔레

비전 프로그램 중에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친구, 첫사랑, 옛 스승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못 보았습니다.

○李美卿 委員 굉장히 인기 있고 오래 한 프로그램인데 한 번도 못 보셨군요.

이 프로그램에서 한 2년 전인가 미국으로 이민가 있는 친구를 찾으려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나라 개그맨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한 주의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대고 그 친구를 찾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교육청의 관리가 화를 내면서 ‘왜 개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려고 왔느냐, 협조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거부당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학교를 찾아가면 성적표도 약간 보여 주고 그래요.

개인의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교육부의 공무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오면 다 보여 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미국 관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李美卿 위원님의 의견에 찬동합니다. 학교가 모든 정보를 다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특정한 교육목적을 위해서 축적된 정보가 학교와 교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학부모도 자기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괜찮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아무나 들여다 볼 수 있는 체제가 곤란한 체제인데 제가 보건대 지금 하고 있는 체제는 아무나 들여다 볼 수 있는 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李美卿 委員 이 문제에 대한 부총리님 생각의 일단을 지금 보여 주고 계신데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시험을 쳐야 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사들한테 개인 학생에 대한 또 개인 학생의 가정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축적됩니다. 물론 교육을 위해서 축적해 놓은 것이고 또 선생님을 믿고 학교를 믿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자기의 개인신상정보를 학교에 맡기게 됩

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하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고 이용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경계하고 또 경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야 되고 혹시나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대단히 염려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美卿 委員 그런데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일명 네이스라고도 하고 나이스라고도 합니다. 다마는 교육부에서 나이스라고 부르니까 저는 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NEIS는 학생 또는 교사 1명을 놓고 그 사람과 관련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그것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해서 교육청 단위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전국 단위로 수많은 정보를 축적해서 인터넷망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방대한 양의 정보가 수집되느냐 하면 81년 학생들부터 정보를 올렸다고 한다면 지금 20년 정도 됐는데 100만 명 정도 학생을 곱하면 20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교사들 37만 명을 합하면 2037만 명의 방대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인터넷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데이터베이스인 것이지요.

이런 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교육적인 목적에 쓰인다고 이해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2037만 명의 방대한 개인신상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올려놓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까 “내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모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학교에 찾아가면 됩니다.

전국 단위로 이렇게 모아서 집적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제가 생각할 때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 통계를 일시에 낼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는 국회에서 국감을 앞두고 자료를 요구할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자료를 축적해서 보낼 수 있겠구나, 이것은 참 도움이 되겠다는 순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한편에 있어서는 유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마는 개인 학생 하나하나의 정보량에 정말로 네 겹, 다섯 겹, 여섯 겹의 방호막을

제대로 친다 하더라도 이 많은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모아져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정보화와 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정보화사회로 가면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정보화와 관련되어 있는 인권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화에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다음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정부화의 일환이다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교육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2000만 명에 가까운 개인신상정보를 인터넷도 아닌 인터넷상에 올려서 자칫 방호벽이 뚫리면 어떻게 이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 놓느냐, 제가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군침이 많이 당기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또 국제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소비자에 대한 이 정도의 자료는 조 단위의 자산가치가 있습니다. 교육행정을 믿고 자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것을 이렇게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교육적인 목적 때문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가 이러한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줄속으로 시간을 앞당기면서 했는지는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방대한 양의 중요한 사업이 이런 식으로 검토 없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비교육적인 마인드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정보를 병역기록카드까지 몽땅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을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것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학생생활기록부 상에 있어서도 빼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빠른 시일 안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할 것과 정보화계획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수천만 명

의 졸업대장과 2000여만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면서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또 이러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李相周 부총리가 그 당시 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에 저한테 보내온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평가단도 구성하지 않았고 법률적인 자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기만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있으니까 당장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담당국장! 앞에 좀 나오세요.

지난번에 평가단을 구성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시행이 안 된 거예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金正基입니다.

李美卿 위원님께서 지난 국감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변명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정보화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해서 국제교육정보화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면 교육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정보화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반적인 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중복 운영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서……

○**李美卿 委員** 아까 무슨 평가위원회 또 하나 만들겠다고 한 것은 그것하고 별도의 것이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지난해 국감 이후에는 그렇게 중복 운영되는 것으로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부총리께서 오셔서 개인의 인권문제라든지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李美卿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의 신상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

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평가위원회를 두라고 얘기한 것인데 지금 같은 취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안 되고 새 부총리가 왔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그 당시에는 개인 인권의 문제보다는 李美卿 위원님께서 방대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보고 평가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美卿 委員**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지금이라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자문은 왜 안 구했어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법률자문은 비공식적으로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검토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런데 나한테는 왜 보고를 안 해서 법률자문을 안 구한 것으로 알게 만들었나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접촉해 왔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을 꼭 받을 예정입니다. 접수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자문을 받으라고 얘기한 것은 공식적으로 빨리 자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고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계속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 받은 것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다음 12월 5일에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가 개정됐는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 법률이 통과하기도 전에 교육공

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이미 수집하고 신상기록 정보를 수집한 것은 법률 위반 아닙니까?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에 관한 전반적인 인사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범은 지난 2001년 3월에 공포된 전자정부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행정기관의 주요업무는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모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공무원중개정법률안을 지난 2002년 5월 13일에 국회에 제출했고 의결된 시각이 12월 5일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李美卿 委員** 전자정부법이라는 모범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자정부법이 모범이라는 것을 들어서 이것을 무소불위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어서 이런 무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에서 너무 과도한 정보를 축적하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관련항목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학생의 경우에는 15개에서 5개 항목, 학부모의 경우에는 15개에서 3개로 축소해서 입력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시켰다고 저한테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러나 축소되었다고 밝힌 부분을 보면 학력조사서나 건강에 대한 신체검사서는 빼놓고 임의로 조사하다시피하는 가정환경조사서의 항목이에요.

그래 가지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뺐다고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가 불신을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그냥 피해나가는 식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얼렁뚱땅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신상정보는 가정환경조사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교무일지 등에 20개 이상의 항목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15개 항목으로 국한해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실무추진반이라고 해서 거의 2400여 명의 선생님이 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15개 항목이 조정되었는데 李美卿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인적사항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美卿 委員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것은 별로 고치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십시오.

장관님한테 다시 마무리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NEIS 부분은 이것이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한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방대한 숫자로 집적해 놓고 그것을 인터넷망상에 올리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직은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그다음에는 그것을 빼놓고라도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몇 가지 항목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에서 교사의 주관 이 강하게 드러나는 항목인 학생의 행동, 특성, 종합의견 예를 들면 ‘이 학생은 매우 난폭함.’ 또는 ‘반항적인 기질이 많음.’ 등등을 기록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인터넷상에 올려놓지 않고 수기된 것을 교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건강기록부 영역은 전산화보다는 수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키, 몸무게, 병력기록 등이 나와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할 때도 대단히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교원인사기록카드에서도 군필, 미필 등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신체사항이나 재산사항, 정당가입 여부, 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등은 삭제 또는 조정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적당하게 몇 가지 조정하겠다고 해 놓고 다른 부분들만 몇 가지 조정하고는 ‘조정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밖으로도 ‘조정 많이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선전하고 넘어갈 생각을 마시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쓰지 않겠다.’ 하는 거부감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평가위원회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일차적으로는 이 항목의 조정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시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정보심의위원회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 유출되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가를 늘상 꼼꼼히 따져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보다 더 교육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무슨 위원회를 두겠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고 무엇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가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제가 제안을 하자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먼저 이 NEIS에 들어가는 정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정착된 후에는 정보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두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만 하고 끝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현장에 가 보았더니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교사, 학부모, 컴퓨터 계통의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선 아이팀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효율성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균형이 잡히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운영을 그쪽에 맡기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러니까 아이팀에 대한 검토를 혼자서 하지 마시고 함께 앉아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시라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알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건강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빠졌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총리께서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美卿 委員 부총리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몇몇 학교를 방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게 머물다 가시고 평교사들은 전혀 만나지 않고 가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밑으로부터의 정확한 소리를 반영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알겠

습니다.

○李美卿 委員 WTO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哲賢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哲賢 委員 부총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보통 새 정권이 들어서면 밀월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총리가 새로 와서 밀월기간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살살 하겠습니다. 답변만 잘 해 주십시오.

지난번 정권 때 교육부장관이 몇 명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교육의 난맥상이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7명의 장관 중에서 어느 분이 제일 마음에 드셨습니까, 기억에 남는 장관이 별로 없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그냥 흐지부지 다 지나가버렸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맡은 장관이 기억에 하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尹德弘 장관이 새로 취임하셨는데 이번에는 취임하기 전부터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인사에서 대 난맥상을 보여 주었는데 盧武鉉 대통령은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정착을 강조하면서 중앙인사위에서 기본자료를 활용한 후에 풀을 구성하고 후보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청와대 인사팀이 평가회의를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통한 후보압축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다시 말해서 5단계 인사시스템을 밝힌 바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한 나라의 중요한 교육수장을 뽑는 과정에서 인사보좌관도 중앙인사위원회도 민정수석실도 모두 사라지고, 다시 말해서 인사시스템은 다 사라지고 누구의 목소리가 컸습니까, 어떤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까?

교육개혁시민연대인가 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나 거의 내정했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반대한 결과 다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상태대로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이 외풍을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외풍에 시달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초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尹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직 조금 더 하려고 이곳저곳 비위 맞추다 보면 지난번에 사라진 7명의 장관처럼尹 장관도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尹 장관의 성품을 압니다마는 신념을 가지시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평생 쌓아온 교육철학대로 행동하시다가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외풍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교육부 자체 내의 시스템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답변이 길 테니까 언제 한번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어떤 행정은 외부에서 어떤 외풍이 있더라도 이리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확립하겠다는 것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NEIS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나이스입니까, 네이스입니까, 니스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교육부에서는 나이스라고 하고 전교조에서는 네이즈라고 합니다.

○權哲賢 委員 왜 네이즈라고 하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에이즈라는 뜻이겠지요.

○權哲賢 委員 전교조에서는 왜 늘 영어로 얘기하다가 이것만 독일어로 나이스라 하느냐 영어로 nice하다, 멋지다는 뜻으로 일부러 그런 어감을 넣으려고 이것만 독일어로 따온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이유도 좀 있었겠지요? 하필 이것만 독일어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발부터 뭔가 조금 불순했던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尹德弘 장관의 양심선언을 듣고

싶습니다.

NEIS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는 개인정보 유출 부분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를 제거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이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취임하기 전부터, 취임하고 나서 장관께서 언론에 말을 너무 쉽게 막 하시는 바람에 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그래서 제가 양심선언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개인적인 소신은 NEIS에 대해서 반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지 않습니다.

○權哲賢 委員 그런 말 한 적 없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정보공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을 하신 적 없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지 않았습니다.

○權哲賢 委員 만약 하신 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오보든지 그렇겠지요.

○權哲賢 委員 WTO 교육개방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權哲賢 委員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교수시절에는 개방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權哲賢 委員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심사숙고하셔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李美卿 위원의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 李美卿 위원이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아니면 이것 자체를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교수할 때 학생들의 이름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 체크하는 수첩이 있었는데 개인정보의 상당수는 교사의 교무수첩에 들어가 있어야 할 정보이지 교육청에 들어가 있어야 할 정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그래서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는 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몇 단계 대책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다마는 오늘날 해킹실력을 교육부가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해킹되어서 정보가 유출되면, 한 사람의 정보만이라도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아서도 안 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조금만 마비되면 교육행정 자체가 마비되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다마는 이것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교육부는 청와대에 이것의 시행을 연기하거나 철회해 달라, 보완할 점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댔는데 청와대의 특정 인사가 시행하라, 어떤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특정업체 로비의 소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어떤 힘의 배후가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시행업체의 요구를 전면 수용했다는 것이 언론보도들의 말입니다.

NEIS를 연구용역하고 시스템 개발하고 물품을 사들이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한 520억 든답니다.

○權哲賢 委員 용역이 6억 몇천만 원 될 것이고 시스템 개발비가 한 100억, 물품이 400여억 원해서 한 500여억 원 되는데 거기에 굉장한 로비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입안 과정과 절차, 청와대 협의과정을 자료로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 NEIS 진행과정의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NEIS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 WTO 교육개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선진국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고 조기유학도 막을 수 있고 어찌고 합니까라는 이 교육개방협상은 사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육의 상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학이 부도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학생이 안 들어오면 대학은 부도 나는 것이고, 대학 부도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대학들이나 교육기관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학 부도는 누가 막느냐, 대학이 부도 나는 사태가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알고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이것을 어떻게 막으실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부도 난 대학들을 돈으로 다 막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도 시장원칙에 의해서 부도 날 때는 부도 나고 사라지라고 할 것입니까?

세 번째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장관! 교육이 서비스업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

○權哲賢 委員 교육은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교육은 문화이자 그 나라를 존속시키고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교육을 단순한 서비스로 생각해서 개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EU 집행부가 문화와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은 외국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WTO 교육개방은 굉장한 위기를 가져오고 연이어 한국 대학의 연쇄 부도를 초래할 것이고 정체성의 위기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 7명의 장관 중에서, 개인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의 李相周 장관이 그나마 조금 기억에 남는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때로는 소신 있게 청와대의 방침과 다른 소신도 가끔 보여 주었고 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발령교사문제 아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미발추 간부들과 만나서 장관이 약속을 했습니다. 사립 사범대학 출신자들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고 당신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퇴임 전에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시행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때 미발추 간부들이 장관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尹德弘 장관께서 미발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받았습니다.

○權哲賢 委員 어떻습니까?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자꾸만 국회교육위원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 사범대학 출신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분규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이신 교육부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걱정되는 이런 문제들이 제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해 주시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교육부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실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權哲賢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서면답변하실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번 기회에 교육행정 운영에 관한 것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榮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榮熙 委員 崔榮熙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명칭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쓰는 것이 좋으나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이 로마자표기법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에 반영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과급에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나이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보시스템 추진과 관련해서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입니다. 한국교총이 3189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무려 95%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기간 전산망에서 이중삼중으로 철통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지난번 우리 전 전산망에 큰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집계에 의하면 상당한 정도가 그런 문제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李美卿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교육행정전산망이 800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그에 맞먹을 정도의 학부모, 그리고 34만 교원들의 인적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시행 20년차가 되면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수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초정보만으로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용에서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생활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교육부가 생각하는 사생활 정보가 무엇인지 그 견해차이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상업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대단히 많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질병이 뭔가 판단을 하고 처방전을 써 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짓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들의 질병이나 증상 등에 대해서는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지 않고, 진단한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약을 짓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썰 만한 중요한 정보는 다 뺐다고 하는데 건강기록부를 보면 모든 신체장애나 질병

에 관한 병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병력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보건교사가 쓰는 병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신장애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또는 생활기록부에 행동특성, 종합의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한히 발전하는 것이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의 행동특성이라든지 교사의 종합의견을 잔인할 정도로 코멘트를 써놓았는데, 그 학생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튿날도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변할 수 있는데 평생토록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께서는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2개의 시범학교를 방문해서 주로 정보교사와 교장선생님만 만나고는, 별문제 없다 학생들의 부끄러운 정보가 썰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과연 장관께서는 부끄러운 것의 뜻을 무엇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간단히 판단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교사를 만나려면 평교사를 만나셔야 하는 것이, 모든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은 평교사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출·결석 입력을, 교사가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자기가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갈 준비도 점검하고 가야 되고 또 학생이 따라 오면 학생에 대해서 지도도 해야 되고, 선생을 해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10분이라는 것은 매우 바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출·결석을 바로 거기에다 입력하라고 한다면 도 대체 사무행정을 위한 교사인지 교육을 위한 교사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운영상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WTO 교육서비스협상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소극적, 방어적 입장에서 조심해서 출발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면 특히 싱가포르 좋은 예입니다. 싱가포르의 교육개방 목적을 보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인더스트리21을 기획하고 향후 10년간 지식기반산업이 GDP의 40%가 되고 일자리 창출 2만 5000개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세계 수준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그 주요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런 세계 수준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인력양성이다 해서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10개 대학에게 개방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에 우수한 대학원이라든지 연구소를 유치할까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아무리 WTO 개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육서비스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개방하는 다른 것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등교육을 열겠다, 고등교육 중에서도 대학보다는 대학원을 열겠다 하는 방향인데 대학원을 한번 보십시오. 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보면, 2001년 4월 기준으로 우리 교육의 질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인 교사 대 학생 비율로 봤더니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이 국공립대학이 40%이고 사립대학이 53%입니다. 이러한 교육여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얼마만큼 실험실습비를 쓰는가 제가 이공계열만 보았습니다만 1인당 연간 실험실습비가 1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실험실 환경, 학생 대 교수의 비율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외국에 대학원을 개방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WTO 개방에 앞서서 우리의 대학원을 수준 있게 올려놓는 노력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입학전형에 대해서 저도 대학을 떠난 지 몇 년 되었고 우리 아이를 키운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작년 국정감사 내용을 다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현재의 대입전형과 2005년도 것의 차이점을 보면 특히 수능시험 탐구영역 반영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계열별로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배점에만 차이를 두었던 방식에서 계열 구분 없이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리고 전에 없던 직업탐구영역을 넣어서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입의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감에서 많이 지적된 바와 같이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민주교육의 차원에서 기회를 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등교육, 전문대학 교육, 또는 실업고등학교 교육의 분명한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실업고등학교를

망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것을 신청한 대학도 많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에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貞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 委員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입니다.

尹德弘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尹 부총리께서 부총리로 교육의 수장으로 발탁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글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등학교에도 있었고 전문대학에도 있었고 대학에도 있었으니까 폭넓게 현장을 잘 알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金貞淑 委員 새정부 출범 이후 8일 정도 있다가 심사숙고 끝에 뒤늦게 취임하셨는데 그것은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사업은 백년지대계다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도 일말의 안도감이 있었고 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그런데 새정부의 대통령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장관들이 새로 임명되어서 활동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상당히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튀는 장관들이 많고 또 어떤 장관은 ‘쓰레기통이나 뒤져서 특종을 써라.’ 이렇게 발언하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개성들이 너무 뚜렷해 가지고 신선한 감은 있겠으나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부총리만큼은 이렇게 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교육은 튀는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께서 취임하신 이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언한 것을 제가 다 모아 보았습니다. 열 가지가 넘습니다. 오시자마자 NEIS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듣고 문제점을 보완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했다

가 즉흥적으로 3월 13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가서 이것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2004년도 대학입시방안이 다 발표되고 2005년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며칠 만에 뒤엎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토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 법인화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것도 서울대학이 펄펄 뿔 일이고 문제가 많은 발언입니다. 기여입학제, 지방대학 육성방안, 고등학교 평준화, BK21사업에 대해서 발언하시고 더더군다나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교수 임용하면서 1억 원씩, 5000만 원씩 챙기는 재단 이사장들이 있다.’ 또 중등학교 교실붕괴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근거를 알고 계시는지, 증거가 있으신지? 증거가 만약 있다면 깨끗이 부총리께서 해결하고 가져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뒤는 발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가장 훌륭한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부 무용론을 주장하는 정치가도 있다.’면서 ‘관료 중 시대감각이 가장 뒤떨어진 것이 교육관료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도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 무용론에 대한 견해와 시대감각이 뒤떨어진 교육관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평소 소신이 있다면 이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주 마피아, 서울사대파 해 가며 싸우는 일은 그만 두어야 된다.’, ‘교육부는 장관 뽕뽕이 돌리고 바지저고리 만드는 곳이며 6개월이 지나면 뭐가 뭔지 모르고 다음달까 장관이 바뀐다는 말을 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뽕뽕이 돌려지지 않고 바지저고리 안 되시려면 어떤 방안이 있으신 지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부터는 학제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엄청난 일입니다. 여론도 수렴하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해야 하고, WTO

에 교육개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외국하고 공동으로 학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등등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5·5·3 제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여론 수렴을 하겠다.’, 또 ‘교사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겠다.’, ‘앞으로 오륙십 가지의 교육과제에 대한 생각이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부도 바뀌었고 대통령도 개혁적인 것 같고 예상을 못 할 정도로 이리 튀고 저리 튀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교육까지 이러니 아이들까지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사업이라는 것을 아시고 선 업무과약, 그다음에 처신과 발언을 올바르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당에 오셨을 때 제가 여쭙어 보았더니 ‘내 교수시절의 사건을 이야기했다.’하셨는데 교육부총리가 사건을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총수로서 너무 가벼운 처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교육부총리에 취임할 때 취임인사로 한 것은 바깥에서 교육부를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다라는 예를 들면서 앞으로 우리 서로 합심해서 이런 평을 듣지 말고 정말로 국민이 사랑하는 교육부가 되자라는 의미의 이야기였었는데 그것을 중간 중간 인용하면 그런 뉘앙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金貞淑 委員 말씀을 돌리시지 마세요.

취임사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중요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 기자와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면담처럼 교육에 대한 단상이랄까 스케치 같은 형태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이 지상에 그렇게 표현되니까 저로서도 매우 당혹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金貞淑 委員 사석에서도 하시면 안 되지요. 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부총리입니다. 한 말씀, 표정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입시제도만 해도 정부 수립 이후 열 번이 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국민들이 예민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건을 전제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부총리답지 않은 처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준화 과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평등과 교육경쟁에 대한 생각을 서면으로 저희 방에 보내주시고, 현재 우리 교육이 위기라고 하는데 교육위기를 몇 가지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지하철 참사 학생가족에 대한 교육 특례용의가 있으신지? 입학도 못 하고 죽은 학생도 있고 아파서 누워 있는 가정도 있는데 명예졸업장제도나 대학입학특례 같은 것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또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의 피해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공교육과 통일교육의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기준과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외국인 노동자 자녀교육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용의가 있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尹榮卓 위원장, 朴昌達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현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NEIS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의혹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CS시스템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도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단기간에 결정되고 단기간에 실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 5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교육정보화 사업을 11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까지는 BPR사업이 있었는데 BPR보고서라는 것이 2001년 3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개입설이 퍼졌고 교육부 내에서는 반대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내부의 반대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와 1년 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정상적인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교육부 총리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교육부에서 'CS시스템이 좋다, 학습지원·학교정보화·교내행정서버 등 교육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겠

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NEIS하고 CS하고 동시에 사용할 것인지, 지금 동시에 사용할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지금 교사들이 NEIS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반대이유인데 과연 교사들이 CS하고 동시사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경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청입니다. NEIS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본 위원실로 보내주시고 전자정부사업 전체의 추진실태를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물론 NEIS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이 결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또 2004년 대학입시가 걱정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시할 경우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완전실시가 안 되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각종 문서를 어떻게 축적·처리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美卿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이것을 전면 폐기한다거나 전면 철회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보완을 해가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WTO 교육 개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의 추세를 보면 해야 되고 우리 교육을 살리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보아서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이 최종보고입니까, 아니면 더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양허안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교육부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고 아직 결재는 안 했습니다.

○金貞淑 委員 그런데 이런 보고를 하시려면 이렇게 다 해 놓고 사후보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교육위에 사전보고를 여러 차례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될까봐 지난 2월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을 교육위도 진작부터 관심을 갖고 보고를 재촉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묻겠습니다.

權哲賢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세계무역기구에 우리 정부가 11개 나라를 대상으로 양허안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金貞淑 委員 그러면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반대로 우리에게 교육개방 양허를 요청한 나라들은 요청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방에 대한 尹 부총리의 소신이 무엇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 개방을 할 경우에 득실이 무엇인가, 지금 유럽연합 같은 데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국제화하면서 온 나라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입장은 선별적, 점진적으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는 대학들은 세계 굴지의 우수대학들만 와야 됩니다. 또 교육개방지역이 지정될 경우에도 국제경제자유지역 내로 해야 되고 또 국제경제자유지역 내의 육성산업에 맞는 분야만 우선 허용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비밀송금이 있을 것이니까 국내 교육비를 고려해서 교육비도 측정해야 된다는 등의 몇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 대안으로서는 양허안을 철회 및 연장하면서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도 언어학원 등등에서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답이 안 왔는데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담교사 배치문제인데 지난번에 학교폭력이 난무해 가지고 장기까지 팔려고 하고 자살소동을 벌이고 왕따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중등이 1만여 개 되는데 저는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효력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부분적이면서 비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이따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토론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昌達 金貞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薛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 委員 薛勳입니다.

먼저 교육부총리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 개각을 하시면서 다른 부서의 장관들은 다 정했는데 교육부총리만큼은 결정을 못 하고 계속 늦추다가 마지막에 尹德弘 부총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늦추게 된 것도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윤덕홍 부총리로 결정된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육부총리를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교육부문이 중요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따라서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교육부총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왜 윤덕홍 총장이 왜 교육부총리가 되셨느냐, 윤덕홍 총장께서 갖고 있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을 한 이유는 이 중에서 개혁성을 높이 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이 윤덕홍 총장에서 윤덕홍 부총리로 변화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점은 어쩌면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를 대통령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한다고 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총리가 되셨는데 윤덕홍 총장이 총장에서 부총리로 변화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장관의 교육에 대한 개혁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과 교육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개혁해 내야 하는 부분에 장관이 해내야 할 일의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윤덕홍 부총리께서 한국의 교육을 정상상태로 만들어내는 개혁을 유감없이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심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방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연히 그 부분을 물리치고 묵묵히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한국의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WTO 교육서비스협상을 해야 되는데 여

러 가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개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부서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현재 조건에서는 시기상조이고 교육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 전략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지금 당장 어떻다는 결정을 안 내리시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안 낼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특별한 불이익이 있느냐, 물론 양허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안 낼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 불이익이 심대하고 특별하냐 이것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안 내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로서는 시간을 좀 벌어야 할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 교육개방에 대해서 국민들 간에 의견교환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잘 몰라요.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적 의견을 집약해서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국민 전체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고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볼 때 국민들에게 교육개방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히 알려지고 국민 속에서 지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선불리 대처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작년이 대선기간이었기 때문에 교육개방에 대한 국민적 대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내기로 되어 있는 이 양허안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는 방법이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교육개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입니다. 상당히 뒤로 늦추어 놓는

것이 우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본다면 3월 31일까지 내야 될 이 양허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교육개방에 찬성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도 고려하면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여유 있게 방안을 찾아야 가장 정확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WTO 교육서비스협상에 대해서는 여유를 갖고 대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마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버는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육서비스개방협상은 48년 정부수립 이후로 우리 교육사에서 볼 때 어쩌면 획기적으로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는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야말로 국민적 관심사로 의견을 모아서 필요하다면 전 국민이 함께 나서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국민처럼 교육열의가 높은 국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유태인보다 우리가 훨씬 더 교육열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교육열정 때문에라도 이 교육개방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손손대대로 미칠 영향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야말로 국민들이 같이 걱정하고 같이 대처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교육부가 나서서 국민 전체에게 물어보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방문제가 닦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지혜를 찾아내는 작업들을 국민에게 오픈시켜 놓고 방안을 찾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朴昌達 간사, 尹榮卓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NEIS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생활 보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오해인지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몇 위원들이 청와대와 관련이 있으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히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지금 몇몇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그런 의혹이 있는 사안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李美卿 위원도 말씀하셨고 대부분 위원들이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는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냥 가볍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냥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만일에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즉각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서두를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밀고나가듯이 할 문제는 아니다, 좀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委員 먼저 부총리와 차관께서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단답으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총리께서는 스스로 밝혔듯이 고등학교에 한 10년 계셨고 전문대학에도 한 10년 계셨고 또 4년제 대학에 10년 정도 계시다가 총장까지 하시는 등 이력서를 보면 30년의 교직경험이 있고 또 10여 년간의 사회교육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것은 이력서상에 보면 부총리가 군에 갔다 온 경력이 없어요. 군대문제는

어떻게 되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대학 2학년 때 휴학하고 50사단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눈 때문에 귀향조치 당하고 이듬해 공군에 입대했는데 다시 눈 때문에 귀향조치 당하고 69년에 징집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러면 휴학은 몇 년 하셨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육군에 간다고 6개월 휴학했습니다.

○李在五 委員 이력서에는 65년도에 경북고등학교 나오시고 69년도에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추가졸업이었습니다.

○李在五 委員 휴학을 하면 이 기간이 안 맞지 않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추가졸업입니다.

○李在五 委員 코스모스졸업이군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五 委員 우선 오늘 안전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립대학 재단이 학생 등록금을 유용할 수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李在五 委員 그러면 어떤 사립대학에서 800억 원 가까운 학생 등록금을 재단으로 옮겨놓고 재단에서 사립대학에 넣는 전입금은 한 30억 원 정도 넣어서 결국 학생들 등록금 갖다놓고 조금씩 이자 보태서 갖다 주는 꼴이 되었는데 그런 사립대학이 있다면 교육부에서 감사해야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3월 7일 서강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부총리께 진정서 낸 것을 받아보셨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직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李在五 委員 서강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3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진정서도 보냈습니다. 교비의 목적 외 사용, 공사비 과다계상, 수익용 재산의 유용 여부, 각종 계약업무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 교육부에 감사를 해달라고 진정서와 공문을 냈는데 장관이 못 보셨다는 말이에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감사관이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李在五 委員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사관, 이런 것 받았어요?

○教育人的資源部監査官 金洪鎭 예, 받았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러면 부총리한테 보고했어요?

○教育人的資源部監査官 金洪鎭 그것은 보고드릴 사항이 있고 감사관 전결로 해서 해당 실국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가 감사해야 되겠지요?

○教育人的資源部監査官 金洪鎭 일반적으로 해당 국과 협의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내용을 확인해서……

○李在五 委員 물론이지요. 교수협의회가 진정서 하나 냈다고 해서 감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이 내용에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되겠지요?

○教育人的資源部監査官 金洪鎭 맞습니다.

○李在五 委員 빠른 시일 안에 서강대학교 재단 비리에 대한 감사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五 委員 사립대학, 특히 종교재단과 관계되어서 종교라는 이름 밑에서 이런 재단비리가 저질러진다면 이것을 묵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부총리의 소신은 어떠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습니다.

○李在五 委員 이것에 대한 감사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五 委員 (책자를 들어 보이며)

감사관, 서강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나온 이 책자 받으셨어요?

○教育人的資源部監査官 金洪鎭 책자로 안 받고 일반서류로 받았습니다.

○李在五 委員 제가 이 책자를 드릴 테니까 부총리께 보고하시고 감사 여부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총리께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학에 갔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정

부정책의 잘못으로 교단에 못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사가 되기 위한 일념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미발추’ 사람들인데 부총리께서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2, 3일 전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李在五 委員 장관이 되기 전에는 이런 사실이 있는 줄 몰랐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몰랐습니다.

○李在五 委員 이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했고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을 어떻게 손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權哲賢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개인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학에 갔는데 졸업할 때 정책이 바뀌어서 교사가 못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시국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법적 조치를 밟아서 교단에 서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만 교단에 못 서게 한다면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위헌 여부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현실은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교사로 발령 내 준다고 한 것이 이 사람들이 사범대학에 들어갈 때의 정부방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저야지요? 개인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부총리께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五 委員 그다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도입 당시에 교육부가 청와대 전자특위에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교육과 교육행정의 원칙·철학 위배, 해킹 등 단순 보안사고에 따른 교육행정 마비 우려,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 보안지침에 정면위배’ 등을 들

어서 중단하거나 연기를 해야 된다고 교육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보고 들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러면 그 당시 교육부가 청와대에 이렇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이 CS 시스템에서의 이야기입니까?

○李在五 委員 그것은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세 가지 문제 그러니까 교육과 교육행정의 원칙·철학에 위배된다,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부에 있는 자료에 나온 거예요. 해킹 등 단순 보안사고에 따른 교육행정의 마비 우려가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보안지침에 정면 위배가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이 껏속말한 대로 답변하지 말고 소신대로 말하세요. 그러면 소신 있는 장관이 안 되잖아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이 순간에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NEIS 이야기인지 옛날의 CS 시스템 이야기인지……

○李在五 委員 2001년도 당시……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또 하나 2001년 12월까지 1470억 원을 투입한 CS시스템의 보급을 완료하겠다고 당시에 교육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인 7월에 1470억 원이 들어간 돈이 무효가 되면서 NEIS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薛勳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1400여억 원이나 든 돈을 완전히 허탕으로 만들면서 NEIS를 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청와대의 특정업체 지원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에서 제기된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거나 아는 것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없습니다.

○李在五 委員 전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五 委員 부총리 되시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五 委員 보고받은 것도 없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五 委員 차관도 새로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누가 교육부에 제일 오래 있었어요? 담당이 누구예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제가 하고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부총리 오셔서 분야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했어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李在五 委員 보고 안 했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경과되어 왔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李在五 委員 CS와 NEIS의 변경과정에 대한 특정업체 지원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 알고 있지요? 국정감사 때도 제기되었잖아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세계일보에 한 번 나왔습니다.

○李在五 委員 세계일보에 났고 국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 자세히 보고하시고,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모를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五 委員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취임하셔서 전교조나 한교조나 교총하고 업무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五 委員 몇 번 하셨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전교조 한 번 만났고 한교조 한 번 만났고 학부모단체 한 번씩 다 만났습니다.

○李在五 委員 만나서 수인사만 했지 현안에 대해서 조율하거나 의견을 안 나누어 봤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李在五 委員 지금 전교조 등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부총리의 개인 생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는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집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화의 원칙에 위배되고 두 번째,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NEIS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세 번째, 학교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와 같은 학생 개인 정보는 학교에서만 수집·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세 가지 현행법의 위반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 보았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저도 학교에 가서 죽 열어보고 개인의 인권에 관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계속 확인 중에 있는데 교육청에 가서도 한 번 열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려고 합니다.

○李在五 委員 이것이 초·중등교육법 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에 당장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알고 계세요?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위배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위배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李在五 委員 그런 기분이 들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五 委員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 기록부나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전산화 안 해서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약간 무식한 질의입니다. 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안 해서 취직에 영향이 있거나 진학에 영향이 있거나 국가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끌고루 통계 내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尹榮卓 위원장, 李在禎 간사와 사회교대)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학부형이 일일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기 아이의 성적도 알아보고……

○李在五 委員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아이의 성적이 어떤지, 생활기록이 어떤지 그것

을 알아보러 학교에 가는 학부형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애들 셋을 학교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내 자식들 성적기록표 한 번 떼어 본 일이 없어요. 학부형이 가서 내 아들 성적기록표를 보자고 하면 학교에서 당연히 주지 그것을 안 줄 학교가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은 그렇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강행한다면 말이 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수시모집에서부터 수능점수가 환산되어서 대학의 입학시험 때 학적부가 그대로 다 날아오니까……

○李在五 委員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 편의, 간소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에 따르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신을 갖고 오셨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부총리가 취임하실 때 상당히 소신 있게 하고 나를 뺑뺑이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한 인사말씀을 부총리가 쓰셨어요, 아니면 써준 것을 읽었어요? 인사말씀을 누가 써주었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우리 부에서 써준 것을 읽었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러면 안 되지요. 尹德弘 부총리가 30년을 교육현장에 계셨는데 교육위원회에 와서 소신 있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부총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직원들이 써준 것을 읽으면서 교육부 직원들보고 나를 뺑뺑이 돌리지 말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되지요?

앞으로 써준 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소신 있게 이야기하시고 모르면 ‘다시 내가 연구해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밑의 사람이 써준 대로 읽을 것 같으면 굳이 尹德弘 부총리가 부총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알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끝으로 교육개방 문제, 아까 내가 전교조나 한교조나 교총하고 정책조율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두 번에 교육부장관 13명을 겪었습니다. 세계

에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교육부장관이 오시면 얼굴빛만 보고 한 번 들어보면 저 장관은 몇 달 가겠구나 딱 알아요. 13명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부는 발표를 하고 전교조는 만날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교육부나 전교조나 똑같이 국민들에게 인상이 안 좋습니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전교조나 한교조나 교총 이런 교육계 관련 단체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나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들쭉들쭉 발표해 놓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총리 재임 중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세요.

교육개방에 대한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개방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교육개방이 옳으나, 그르냐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부총리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어떻습니까? 지방대학은 신학기에 정원의 60%밖에 모집을 못 해요. 지방대학은 학생이 없어서 1학년 때 겨우 모집해 놓으면 2학년 때 다 도망가고 없고, 내가 어느 대학을 조사해 보니까 2000명 정원에 학생이 400명이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도 지원자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교육환경인데 개방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부총리의 소신을 한번 물어봅시다.

교육단체에서 낸 자료인데 보셨겠지만 일곱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 교육비 폭등으로 국민의 허리는 휘다, 두 번째 경쟁력에 따른 천차만별의 불평등 교육이 현실화된다, 세 번째 공교육 내실화와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된다, 네 번째 교육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국내 사학기반은 허물어진다, 다섯 번째는 교육노동자의 신분 역시 불안해진다, 여섯 번째 민족정체성이 상실된 문화적·지적 식민지로 전락한다, 일곱 번째 교육정책 결정권이 WTO로 넘어간다, 이 일곱 가지를 들어서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부의 정책은 그만두고라도 이 일곱 가지가 일리가 있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미 외국의 원격교육기관이 국내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을 통해서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미 지금 현행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수준 이상 더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렇습니다. 개방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나라 현재의 교육 시점에서 교육개방을 전면화할 때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교육계에 바람직하나 안 하냐 이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이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은 저와 같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저도 이 수준 이상의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李在五 委員 예, 알았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에 기자 분들도 와 계시는데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가면 아마 통상협정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전략전술상 차질이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우리 기자님들도 국익에 충실하신 분들이니까 그 정도는 다 아시리라 믿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맡는 교육부총리인데 저는 盧武鉉 정부 임기 동안에 부총리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盧 대통령이 장관들과 2년까지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좋아요. 다른 장관이야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얼마든지 업무의 연속성이 있지만 교육부총리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위원들도, 잘 나가다가 장관 바뀌면 또 새로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헛갈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가지고 다른 장관은 6개월 만에 바뀌도 좋은데 국회에 갔더니 교육부총리는 대통령 임기와 같이 하라고 그러더라,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 가지고 그 답변을 다음 교육위원회 때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禎 李在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敬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敬天 委員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 출신 金敬天 위원입니다.

제3대 尹德弘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또 제4대 徐凡錫 차관의 취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불안요소를 몇 가지 들라고 한다면 정치불안, 교육불안, 경제불안을 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님께서 취임하신 후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하지만 돌출적인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혼선을 빚었다고 보는데 시인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시인합니다.

○金敬天 委員 먼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다시 말해서 NEIS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일선 학교를 방문하면서 NEIS의 실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총과 한교조 그리고 대다수의 학부모단체는 NEIS 도입에 원천적으로 찬성하면서 NEIS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전교조는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시·도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따른 인권침해 및 교원통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교조는 일반교육행정은 NEIS로 운영하되 교무·학사업무 등 5개 업무는 종전 CS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5시간 내지 6시간을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 학교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집단생활과 학습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사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전후해서 1년에 두 번씩 학부모에게 학교생활이 담긴 통지표를 전해주는 목적은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전달 기능을 강화해서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가정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NEIS 도입을 통해 가정에 전달되는 가정통신문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내용을 대폭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WTO 교육개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교육부문 최초 양허안을 2003년 3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양허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2월 6일에 EU집행위 무역담당위원장 Pascal Lamy가 교육, 문화, 보건 분야를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며 교육개방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0월 18일에 유럽의 문화·교육부장관들이 이탈리아 브릭센 지방에 모여 교육의 상품화를 부추기는 GATS협상을 거부하자고 선언했고 2001년 9월 28일 전세계고등교육기관이 연합으로 고등교육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GATS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양허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서둘러 양허안을 제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U국가의 교육제도는 원칙적으로 무상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교육제도는 유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대학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업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의무교육 기반이 취약하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정부의 지원하에 교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서로 다른 교육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개방의 토양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밖에도 미국의 교육기반은 민족성이 희박해 교육개방이 그리 어렵지 않은 반면 유럽이나 우리나라 등 아시아 각국은 민족성이 농후해서 교육개방이 쉽지 않은 점이 있는 등 교육개방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개방할 경우 교육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교육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양허안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5학년도 대입전형을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실업계열 학생을 위한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이론시험과 더불어 예·체능계 학생들이 실시하고 있는 실기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예·체능계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도 실기시험 외에 예·체능계 탐구영역을 신설해서 예·체능계 고등학교를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께서 2006학년도 이후 시험부터 학교수업 정상화를 위해 수능능력시험을 대학입학 자격 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언제쯤 확정해서 발표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尹 부총리께서는 5·5·3 학제개편을 비롯해서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법·의학 전문대학원 2006년 도입 추진, 교사다면평가제에 학부모 참여 등 교육개혁방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교육개혁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이 시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언론에 나타난 문제점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선 사과 말씀 드릴 것은 제가 교육부총리라는 공인의 자리에 대해서 아직 몸에 잘 맞지 않고 지방대학총장 시절에 언론인 등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이야기하던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평소에 제가 늘 마음속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고 생각한 것이었는데 수능능력시험은 2005학년도까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발표해도 2007년이나 2008년에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특히 학제문제는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후를 보고 연구·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그냥 얘기한 것을 기자들이 표제를 그렇게 뺐기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물론 그것은 쉽게 얘기를 많이 한 제 불찰이지

요.

○金敬天 委員 사실 총장이나 부총리가 개인의 자리는 아닙니다. 공인의 자리인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입장에서 구체적 논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대단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그리고 오늘 의제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폐교학교라고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돈을 쓰고 보자는 식인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건물 신축과정에 대해서 교육부처럼 관리가 소홀한 곳이 없다, 일단 예산을 내려 보내면 죽을 쭈든지 밥을 짓든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도 좋은가 하는 제보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일단 폐교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수리한 곳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또 지금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보를 저에게 주시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일단은 전국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알겠습니다.

(李在禎 간사, 尹榮卓 위원장과 사회교대)

○金敬天 委員 제가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 질의시간이 남은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WTO 교육개방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양허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양허안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 방법 그다음에 3월 말까지 유보하고 미제출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행법상 인정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제출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처는 상당히 많이 개방할 것으로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신

중하게 검토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유보해 놓은 채 마음을 비우고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敬天 委員**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실무팀과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부가 도입한 NEIS를 놓고 교육당국과 전교조가 대립하고 있어 일선학교들이 뒤숭숭한 분위기인데 앞으로 교육부와 전교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개인적으로 전교조뿐만 아니고 교육단체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만나서 협의하고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정책의 초기 입안단계부터 현장의 이야기가 접수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메커니즘만 있다면 대립구도는 차츰 사라질 것입니다.

○**金敬天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부총리님의 심사숙고 그리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발추 교사에 대한 문제인데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넘칠 정도로 많은 글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발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부총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미발추 문제는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임용고시제도가 변화하는 과도기에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점과 그 문제가 헌법소원에서 위헌판결 여부와 관계가 있다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사실 교육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교육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교육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景湜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尹景湜 委員** 전통적인 교육의 도시인 충북 청주시 출신의 尹景湜 위원입니다.

저는 2월에 교육위로 보임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오늘 처음 국회에 출두하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장관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선배위원들께서도 부총리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과 개혁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임명의 배경인 것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유행어로 코드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코드는 본 위원이 알기로 사상이나 철학 등이 비슷하다, 지향하는 바가 같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어떤 습관이나 버릇 등이 같아서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성에 있어서는 부총리님의 교수 시절이나 총장 시절에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과 닮은 습관이 드러나는 부분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여과 없이 말씀하시고는 말을 바꾸시고, 말을 너무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대북 비밀송금 검찰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선거 때와 당선자 시절과 취임 후의 발언이 많이 바뀐 사실들을 부총리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닮아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NEIS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마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교육부도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교육부 자체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계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명칭부터 네이즈인지 나이스인지 천차만별로 부르고 있고 근본적으로 전자정부라는 것은 행자부가 중심이 되어서 일반행정 업무분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전문적인 분야인 교육에 접목

을 시키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발과 다른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주장까지 강력하게 대두되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는 분야는 일반행정 분야와는 다르고,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네이스인지 나이스는 우리 교육현장을, 또 우리 교사들을 동사무소의 서기로 취급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시스템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인감증명 발급하고 지방세 등의 납세증명도 발급해 줍니다. 동 서기나 면 서기들은 자료를 입력하고 발급해 주는 것이 업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수업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교과연구를 해야지 학생들의 변동사항, 성적표 등을 전산입력하는 일이나 하고 앉아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수업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시스템이 거기에 무슨 기여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앞서서도 인터넷으로 다 들여다본다, 우리 교육이 언제부터 얼마나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서류는 선생님들이 수작업으로 떼어 주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충실하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지, 그 귀한 시간에 전산입력에 몰두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교조가 NEIS 시스템의 시행연기를 요구하면서 그 사유로 개인정보유출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납득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육부에서 항목을 많이 줄인다니까 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가중된다면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좀 과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NEIS 시스템이라는 것이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자부나 기타 부처에서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천천히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해도 교

육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교조 측에서는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보화 사업을 재평가한 다음에 시행하자는 입장이고 반면에 교육부의 입장은 가칭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시행해 보면서 보완하자는 입장으로 서로 앞뒤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3월 21일까지 구성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 계시는데 지금 전교조가 여기에 참여하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직은 대답이 없습니다.

○尹景湜 委員 며칠 안 남았는데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하는 교직원단체나 그 밖의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해 나가실 것인지, 전교조 불참 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TO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무려 27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방계획에 대해서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 제출된 교육개방요구안의 철회, 이 달 말로 예정된 교육개방계획서 제출 중단, 교육개방과 관련된 모든 정보 공개, 교육개방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께서 임명되시고 나서 언론에 난 기사를 보니까 직선제로 총장에 임명되고 난 후에 기획처장 시절의 캠퍼스 매입 문제로 인해서 재단의 요구로 교육부 감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 재단에서 해임을 했는데 교육부 재심에서 구제되신 사항이 보도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별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재단에서의 해직사유는 무엇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기획처장 시절에 교직원보수규정을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했다는 것이 해임사유였습니다. 토지매입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학교의 관례상 노동조

합과의 임금협상 부분은 노동법에 의해서 이사회 의 의결보다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처장이니까 사측 대표로 직원들과의 임금협상이 4월 중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타결되자 3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면서 당시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노사협상이 우선이니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했는데 훗날 제가 총장선거에 당선되자 저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교육부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경징계를 받았는데 경징계는 총장 취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부 재심을 통해서 돌아갔고 훗날 고등법원에서 尹德弘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현재는 다 해제되었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사무처장 소관사항이었는데 일종의 재단분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尹景湜 委員 그것이 궁금해서 물은 것은 아니고 결국 재심에서도 구제되고 고등법원의 판결까지 나서 결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결국 재단이 부당하게 해직처분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재단이 무리하게 해직까지 하게 된 경위는 반대파 교수들이 재단에 압력을 넣어서 그런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기획처장 재직 시에 총장출마를 했을 때 한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가 내려왔을 때 당시 재단 이사장이 교육부가 학교를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사장이 사직서를 냈고 전 이사들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당선자로 있었습니다.

그해 9월에 교육부로부터 다시 임시이사가 왔는데 그 임시이사가 제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났으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 부총장이 6개월간 총장권한을 대행하라고 했는데 그 부총장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저를 해임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해임 당한 것입니다.

○尹景湜 委員 그런 저간의 경과를 보면 사학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체험도 하신 것 같은데 사립학교법 개정 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 견해를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대육성특별법 제정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셨는데 평소 지방대 육성에 관한 소신과 의지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총리님께서 신뢰를 받으면서 권위도 인정받는 부총리로서 교육을 바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禎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李在禎 委員 먼저 부총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과 교육 개혁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사말씀하신 것에 보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총원칙이 세워져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교사들하고 학부형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李在禎 委員 교사, 학부모는 어떤 방법으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킬 계획이신지, 구체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다음 두 번째 WTO 교육개방 문제는 별도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인사말씀 세 번째로 얘기하신 내용이 썩 분명치 않은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하여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현행 대입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것 맞는 말씀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禎 委員 그다음에 ‘2005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이전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현장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철저히 사전 준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체제는 2005년도까지는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 쪽으로 대학입시제도를 바꾼다면 지금부터 연구 검토하면 그 시행이 2006학년도 이후로 가게 되니까 먼 훗날 우리나라 대학입시를 위해서 지금부터 연구검토를 시작한다는 뜻으

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在禎 委員 2006년도부터 새로운 대입제도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니요, 새로운 수능제도입니다.

수능성적에 탐구영역, 직업탐구영역 이렇게 몇 가지 새로운 선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철저한 사전준비라고 하는 것의 목적어는 수능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입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수능에 지금 과학탐구, 직업탐구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점수화, 또 수능 점수화에 따라서 대학입시 반영 정도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연구 검토한다는 말입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니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교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능제도를 보완해서 2005년도 수능시험 이전까지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禎 委員 제가 미흡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문장을 보아서 도저히 내용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장황하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수능 교과목에 대한 추가 내지는 조정 작업이 필요해서 그것을 2005년도까지 해 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2006년 시험부터는 새로운 방향의 것이 적용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6년도 이후 대학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 부처에서 정책토론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2005학년도까지 지금 현재의 수능제도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의 의하면 수능의 선택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점수에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확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李在禎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능의 교과목 조정이 필요해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로운 수능제도를 도입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2005년 이전

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야 학생들이 무엇인가 깨닫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2005년 이전에 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하신다는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런 뜻이 아닙니다.

○李在禎 委員 제 질의에 대해서는 문서로 정확하게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부총리님의 문서는 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써야 합니다.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문서에 이런 것이 부정확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禎 委員 대단히 죄송한 질의입니다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앞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李在禎 委員 아니, 이것이 부총리님께서 남이 썼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직접 쓰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회피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발표한 부총리님의 공식문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관한 안은 현재 다 나와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아니, 제가 드리는 질의는 2005년도까지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고 2005년 수능시험 이전까지 철저히 준비를 해서 현장정착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도부터 정착되느냐는 말씀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실무자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지금의 수능과 다른 직업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선택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제도가 소프트랜딩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李在禎 委員 2005년도부터 수능 내용이 바뀌는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습니

다. 그것이 8월까지 나가야 되는 후속조치들입니다.

○李在禎 委員 이 문서의 내용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혹시 학부모들이 이 문서를 보고 혼란이 있을까봐 제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대단히 죄송합니다.

○李在禎 委員 다른 질의는 대부분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부연하지 않고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교육개방에 대한 문제가 오늘 긴급한 우리의 현안이고 3월 31일이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열한 나라에 대해서 양허요청한 일이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禎 委員 거기 내용을 보면 초·중등교육을 제외한 고등·성인 및 기타 교육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 개방을 하도록 양허요청을 했습니다. 열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다 모릅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면 우리나라가 외국 10개 나라로부터 양허 요청을 받았는데 이 10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대충 알고 계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여기 적혀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아까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는 개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禎 委員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열한 나라에 대해서 양허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도 개방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실은 그렇습니다.

○李在禎 委員 열한 나라에 대해서 개방요청을 했으면 우리도 역시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총리님의 답변을 번복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런 뜻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개방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실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저는 유보를 해놓고 차츰 통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인데, 지금 유보도 될는지 안 될는지 관계관들과 협의해 보면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제 개인 생각은 교육단체들이 사회적으로 불안해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李在禎 委員 부총리께서 취임하신지 며칠 안 되어서 사실 이런 질의를 부총리께 드린다는 것이 송구스러운 일입니다만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밝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와 보건 분야는 3월 개방을 하지 않기로 정책을 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禎 委員 그런데 문제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WTO의 DDA 회의에 교육부에서 누가 다녀왔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協力擔當官 金應權 그 회의에 교육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李在禎 委員 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協力擔當官 金應權 그 당시 정부 대표단은 외교부에서만 구성되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외교부에서 대표단 구성할 때 교육부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일이 있었나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協力擔當官 金應權 WTO 이사회의 각료회의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이 대표로 가고 교육부의 참여여부를 공식적으로 물어온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이때, 미안한 얘기지만 시민단체들도 다녀왔습니까?

이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그 당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보고도 받고 논의도 했었어야 옳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된 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쪽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 일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지는 거의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육부 안에 양허안 협상과 관련해서 이

일만 전담하는 직원이 누가 있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사무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이름이 뭐지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情報化企劃官 金正基** 박주용 사무관입니다.

○**李在禎 委員** 박 사무관은 이 일만 하고 있나요, 다른 일도 하고 있나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協力擔當官室教育行政事務官 朴株用**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나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協力擔當官室教育行政事務官 朴株用** 실·국하고 협조해서 하고,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 또 교육 분야의 특별 연구진하고 6월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같이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동안에 협의한 것들이 다 문서로 되어 있지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協力擔當官室教育行政事務官 朴株用** 예,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정부 내에서 협의한 것도 있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協力擔當官室教育行政事務官 朴株用** 정부 내에서는 과장님들하고 협의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완벽한 공문서 작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면 지금 실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일을 해 보시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協力擔當官室教育行政事務官 朴株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李在禎 委員**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 논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소신껏 대답하세요.

○**教育人的資源部國際教育協力擔當官室教育行政事務官 朴株用**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주 토요일에도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한 가지 한계에 봉착하는 것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일일이 정부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주장이라는 생각입니다.

○**李在禎 委員**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인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인력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李在禎 委員** 오늘 우리가 토의하는 3개 현안 가운데 교육개방이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나오셨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몰랐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시다면 부총리께서 오늘 국회에서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적어도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나오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장관이 되어 오니까 이 문제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부토론을 거쳐 차관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여론들이 들끓어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자 해서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예를 들면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 의협 자체에서 의료개방에 관한 대비를 1년 전부터 자기들 돈 모아 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전문가를 제네바회의에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서 교육계는 이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을 사실은 저 자신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총리께서 범정부교육개방대책위원회 또는 태스크 포스를 지금이라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대비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좀더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李在禎 委員** 그러면 10개국에서 한국에 개방요구를 하고 있고 양허안에 대해서 3월 말까지 답변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3월 31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양허안을 제출해 두면 앞으로 협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우선 유보를 시켜놓고 우리 부 내에서 개방의 득실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하는 팀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인수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못 해 보셨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인수위에서는 유보 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교육부에서 4개 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이 문제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 수가 2001년도의 경우 72개국에 무려 14만 9993명에 달하고 있고 유학 연수비용이 9억 6000만 달러로 거의 10억 불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제화에 의해서 우리가 그만큼 많이 내 보내고 그들이 교육과 학위를 받고 심지어는 MBA 학위 같은 것을 받는 경우 엄청난 자기 자신의 특권도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문을 닫고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부총리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과 계획을 추후에 문서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교육인프라가 어렵고 구조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조기유학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도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부총리께서 사건을 전제로 기자들에게 5·5·3 학제개편 이야기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국제적 기준 속에서 우리 교육의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내고 그 판단 속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 아래 해답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부총리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육개혁에 관한 질의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玄勝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玄勝一 委員 먼저 부총리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가 앞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아주 대답하시기 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솔하게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부총리께서 오늘 국회에 처음 나오시면서 어떤 질의가 나오는 것을 제일 걱정하셨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아직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대답할 수 없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玄勝一 委員 최근 부총리께서는 5·5·3 학제를 사건으로 말씀하셨다가 장관으로서 그것을 취소하셨는데 사건으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생각에서 5·5·3이 좋겠다고 생각하셨고 또 취소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취소하셨는지 대답해 주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여기서도 사건이라는 낱말을 써서 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玄勝一 委員 질의에 답변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취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군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스물일곱이나 여덟은 되어야 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스물하나나 들쭉 되면 경제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 늦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지금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두 10학년입니다. 이 10학년은 국민 공통기본과목 시스템입니다. 실제로는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의 교육이고 고2, 고3이 되면 공부를 더할 사람을 위해 선택과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으로 보아 어린 아이들이 일찍 한글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치원 1년을 공교육화한다면……

○玄勝一 委員 길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유분방한 교수로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취소하셨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면담 수

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5·5·3제도로 우리나라 교육이 곧 바뀔 것 같은 표제를 붙여서 나왔을 때 기자들이 저보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쳤느냐,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냐라고 물어서 제가 경솔하게 이야기를 잘못해서 나온 부분이다라고 사과하고 교육부 자체에서 또는 우리들끼리 정책토론을 해 본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玄勝一 委員** 알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미·독일·일본·불란서 같은 데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몇 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우리처럼 길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玄勝一 委員** 교수와 장관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교수는 자유분방하게 비판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장관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심각하게 그것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玄勝一 委員** 영국과 독일은 대학 들어가기 전 교육연수가 13년이고 미국·일본·불란서는 12년입니다. 우리보다 짧지 않습니다.

장관으로서 개혁성하고 전문성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역시 전문성이 더 중요하겠지요.

○**玄勝一 委員** 장관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구와 의논해야 됩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부 내의 직원들과 의논해야지요.

○**玄勝一 委員** 부의 직원을 바지저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지 않습니다.

○**玄勝一 委員**尹 장관께서 대구 사람이시고 장관으로 취임하셨는데 아무튼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얼마간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앞에서 직접 이야기는 안 할 것입니다마는 장관을 사랑하는 모든 사

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부하 직원들 가운데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관을 하시는 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몇 마디 해 보는 것입니다.

정권 인수과정에서 인수위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고 또 교육부에서도 평소 지론하고는 다른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회로부터 빈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최종 작성했던 보고서인 교육정책건의서가 교육부장관의 정책을 앞으로 구속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교육부의 의견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수위가 10개의 정책과제를 만들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나온 10개 과제를 보니까 저도 이 정도의 교육개혁은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속 여부에 관한 문제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교육개혁을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玄勝一 委員** 그러면 장관으로서는 인수위가 내놓은 개혁안이 타당하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교육행정과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교육의 총수로서 볼 때 인수위가 내놓은 안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는 그렇게 정책을 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玄勝一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인수위 안 중에는 교수회의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되는, 민주화된 질서가 있는 학원분위기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대학의 각종 중요한 경영에 어느 정도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玄勝一 委員** 그래서 법제화까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玄勝一 委員**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니 말씀드릴 텐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판단

하셔야 됩니다. 尹 장관께서도 대학총장 출신이고 학교 운영의 경험이 많으신데 총장으로 재임하실 때 대구대학교는 교수회의가 법제화 되지 않아서 과연 교수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교수회의가 법제화되었을 때 그다음에 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판단하시려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지 ‘인수위가 한 것은 괜찮다고 본다’ 그런 식의 대수롭지 않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마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술자리다’ ‘사석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런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자나 깨나 공인은 공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교조가 광주시교육감한테서 반성문을 받은 파문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얘기 들었습니다.

○玄勝一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는 교육감이 반성문을 썼다는 것은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고 또 전교조도 의견개진이나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야 되지 교육감을 압박질러서 그런 문서를 만들게 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玄勝一 委員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공교육 붕괴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장관께서 이것을 시정하고 바로 잡기 위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걸림돌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밖에 있는 교육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전교조가 있으면 전교조에 반대되는 단체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단체가 교사들의 의견이 집적화되는 회로니까 여러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책을 짜면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옛날에 비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다.

○玄勝一 委員 장관께서는 전교조를 어떻게 보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시기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초기에는 교육현장의 민주화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참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조금 이익단체 내지는 교사이기주의 같은 면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얘기를 해 가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玄勝一 委員 전교조가 교육감하고 교장을 압박질러서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의견수렴해 가지고 조율하시는 쪽으로 하실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연구를 해서 발령을 내는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인사조치를 할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玄勝一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학원사회에서 불법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장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앞으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짤 때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복하면 그때는 아주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玄勝一 委員 아까 제가 교수와 장관의 차이를 물었는데 장관은 이해관계의 조율에만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관에게는 교육계의 기본질서를 지키라고 국가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계를 앞으로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장관다운 권한 행사를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 문제가 많은 것에는 교육계 내부의 모든 질서와 기강과 윤리가 송두리째 무너진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바람직한 교사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사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 장관다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교장은 교장다워야 합니다. 그런 것이 온통 무너져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祐呂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黃祐呂 委員 오늘 부총리로 취임하시고 국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여러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경력에 보니까 이화여고 교사를 시작으로 각종 시민단체, 교육단체를 거치시고 대구대학 총장을 하시다가 장관으로 오셔서 다양한 교육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교육부장관 한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黃祐呂 委員 오늘 솔직하게 ‘아직 실무적인 파악이 안 되었다, 현안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소신껏 답변해 오셨는데 장관 하시니까, 특히 부총리로서 많은 정책을 조율하려니까 어려우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黃祐呂 委員 현안을 파악하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실 것 같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한 6, 7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黃祐呂 委員 이번 대통령께서는 아마 장관을 오래 앉히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장관 임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1년이 채 안 되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러면 尹 부총리께서는 본인이 예상하는 임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글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黃祐呂 委員 혹시 임명이 되실 때 대통령께서 당부말씀이 있었습니까? 또 본인이 왜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었는지 짐작되는 것은 있으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왜 발탁되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부터 각종 학교를 경험했다는 것이 아마도 일하기가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대

통령과 직접 얘기한 것은 없는데, 다만 오랜 산고 끝에 나온 결과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만 받았습니다.

○黃祐呂 委員 지금 저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 교육부총리 인사가 인사 중에 가장 어려운 인사였고 또 그만큼 중대한 인사입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교육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 있고 탁월한 식견, 투철한 정책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을 모시기를 원하고 또 한번 모셨으면 5년 내내 교육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소망이고 오늘 느끼셨겠지만 국민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꿈에도 생각 안 하셨고 또 앞으로 6, 7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장관께서 오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발언하신 것을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과격하시고 그동안의 것을 개혁하시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셔서 한편으로는 박수를 쳤고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온 언론과 국민이 질의를 했는데 뜻밖에도 그것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 사과하고 취소한다 이래버리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앞에서 여쭙어 보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교육철학, 교육정책의 기본적인 것은 내심으로 갖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품이 겸손하시고 유연하셔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부터 연구하시면서 앞으로 장관을 하실 것인지…… 어떻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방담 내지 면담 수준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제가 옛날부터 죽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감각도 필요할 것이고 사회 여러 세력 간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생각을 그냥 얘기했는데 그것을 활자화하는 바람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은 그렇습니다.

○黃祐呂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들, 제가 메모한 것만 해도 굵직굵직한 일고여덟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불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 속 깊이 평생을 생각하신 것이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과 정책 짜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黃祐呂 委員 현재 장관으로 부임하셔서 보고를 받으시고 또 위에서 아래를 보고 부분에서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부분을 생각해 볼 때는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본인이 느끼셨군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그렇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되겠구나, 특히 교육부의 교육공무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과 더 얘기해야 되겠다는 부족함을 느끼셨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그렇습니다.

○黃祐呂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늘 일관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기본은 교육철학에 근거를 두어야 되고 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원리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것의 집행과정으로 교육정책이 유출될 때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또 나라의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습니다.

○黃祐呂 委員 기본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질서로 생각하는데 최근의 교육관 중에는 사회주의적 또는 민족주의적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교육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철학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이런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핵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최근 일부에서 논의하듯이 그동안의 교육방향이나 철학은 잘못되어서 무언가 방향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적인 질서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성에 관한 부분이 강조될 때 또는 평등성의 문제가 강조될 때는 조금 자유시장경제적인 질서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黃祐呂 委員 통일관이나 대북관, 또 여러 가지 민족주의적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통일관이라고 말씀하신다면……

○黃祐呂 委員 예를 들면 민족이 국체보다 우선해야 된다는지, 또 그동안 우리 교과서에 일관되게 나타났던 사상적 경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는 기본적으로 예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통일교육이나 통일에 대한 것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黃祐呂 委員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중에 대학입시나 고교평준화문제 이런 점에서 부총리께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른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두 이념 중에 평등성이 일차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외국에 비해서 상위 5%가 희생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고 이것이 나중에 국가적 부담으로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우수한 사람들이 외국으로 유학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알고 있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공통교육에 관한 한은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의한 평준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인재, 또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만드는 것 또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특수한 학교들이 결국 또 대학입시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 부에서 의논하기로는 특수영재학교를 만들면 이 영재는 대학입시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입시와 연계된 연결프로그램으로서의 특수영재학교를 교육부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黃祐呂 委員 좋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의 공익법인화도 언급하셨고 또 대학입학에 대해서 수능시험이나 기타 국가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의지를 보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학측에서는 그것은 대학의 자율사항 아니냐, 그것을 왜 장관이 언급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입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공공성 또는 민주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제 대학에서 손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대학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문제는 지금 서울대학이 우리나라 입시경쟁의 목표가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이 입시로부터 좀 벗어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하버드나 예일 같은 세계적인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으려면 교육부가 규율하는 것보다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일본의 동경대학이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일본의 국립대학교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鄭雲燦 총장을 만나면 일본에 그런 예가 있는데 서울대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계획입니다.

○黃祐呂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으니까 그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은 대학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黃祐呂 委員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우려가 사립대학, 사립학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립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자율로 넘겨 놓아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강한 대립을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사립대학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습시다. 다만 사립대학도 대학인만큼 기본적으로는 경쟁과 자율체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상당한 부분들이 사립대학이니까 정부가 보조를 해서 육성할 대학과 육성하지 않을 대학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시다.

○黃祐呂 委員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물으실 때 장관 또는 부총리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더 조정하겠다,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장관은 사실은 조정자의 역할보다는 정책수립과 집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조정역할은 다른 여러 위원회와 협의체가 있고 또 범국민적인 의견도출을 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정책에 대해서 결국 결론을 내리고 집행하는 것은 오로지 부총리이자 장관의 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자기의 강한 입장과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첫 상임위에서 받은 본 위원의 소감이예요.

지금 갑자기 장관이 되셔서 언론을 접하고 보니까 언론이 대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더라, 또 국회의원들이 옛날같이 우호적이 아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황해 가지고 개인의 색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왜 장관으로 오셨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평균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장관 자리에서 6, 7개월을 준비하실 수는 없고 오늘 밤이라도 가서 전념하셔서 그야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리 정리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기존의 교육부 입장이나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호

름과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어떤 점을 개혁하려고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께서 꼭 하고 싶다는 것을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는 우선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방의 교육감이나 지방의 교장선생님한테 위임을 하고 교육부는 문자 그대로 20년, 30년 후 원래의 교육인적자원부로서 정책 기획·입안 쪽에 더 힘을 기울이는 부로 다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그런 작업에 들어가고 또 교육인적자원부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정책을 짜는 데 전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黃祐呂 委員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정권, 현 정부의 문제점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너무 격변이 있었고 특히 교육가치, 백년대계에 대한 공약이 부실했습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그 정당이 만드는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또 그 공약을 가급적 집행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번 정부는 대선과정이 특이함으로써 대선 교육공약이 준비가 안 되었거나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수위라는 데에서 공약을 개발했습니다. 급조된 그리고 상당히 검증되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공약이 형성되다시피 했다고 봅니다.

이제 장관이 오셔서 가지고 또 한 6, 7개월 준비기간을 주어야 정책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선 때 나름대로 만들었던 공약, 인수위가 결정한 여러 가지 정책 제시, 장관이 앞으로 내놓으실 이런 문제 위에서 많은 불안과…… 그래서 언론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관심을 갖고 촉각을 세우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굳건한 교육정책을 내놓으셨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그다음에는 인수위가 기존의 정책을 보고받은 후에, 새로운 정책과 조율한 후에 장관이 그것을 당당히 집행해 나간다면 우리 교육정책은 걱정을 안 할 텐데 본 위원들도 국회에서 앞으로 교육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하나하나 물어보아야 될 판입니다.

이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그렇습니다.

○黃祐呂 委員 이 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씻는 길은 장관이 조만간에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셔서 다음 4월 상임위부터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의논하시고 국민들 앞에 발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昌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昌達 委員 한나라당 朴昌達 위원입니다.

尹德弘 부총리의 취임을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열두 분의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소신도 들었습니다. 저는 중복을 피하고 사실 아직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가급적 피하고 소신만 들어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尹 부총리께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시민운동과 개혁세력의 좌장격이시고 또 본 위원과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집행위원으로서 같이 활동도 했고 남다른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는 3월 28일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4월 3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朴昌達 委員 4월 3일 업무보고 이후에 부 내의 인사를 하셔야 되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朴昌達 委員 제 부탁의 말씀은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교육부 식구들을 인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인사 이후에는 말썽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에 의거해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 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주무장관 겸 부총리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 장관으로 오시기 전에 현재 대구대학교의 교수직을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사표

를 냈습니까, 휴직을 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사직을 하고 왔습니다.

○朴昌達 委員 사직을 안 하시고 만약에 장관으로서 그냥 교수직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장관직이 끝나면 교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朴昌達 委員 현재 장관으로서 교수직을 그대로 계승하게 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학교법에 의하면 교수는 휴직을 하고 공직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朴昌達 委員 장관으로서 교수직을 겸직할 수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겸직은 안 되고 휴직이어야 됩니다.

○朴昌達 委員 안 되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朴昌達 委員 만약 현직 장관급이 지금 교수직에 임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휴직이어야 될 것입니다.

○朴昌達 委員 만약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휴직처리를 해야지요.

○朴昌達 委員 아직 겸직을 하고 있다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방송위원회 강대인 위원장이 3월 1일자로 건국대학교 교수직을 임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송위원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부총리께서는 盧武鉉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철학이 확고한 사람을 5년간 줄곧 교육부장관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바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朴昌達 委員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개 정부 부처 장관 인사추천을 받은 지난 1월 25일 장관 인사추천 최종 접수건수 현황을 보면 온·오프라인 1870건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추천건수가 228건으로 12.2%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부 장관의 약 2배입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 부총리 인선기준으로 제시

한 개혁성과 공동체의식, 경영마인드, 교육 주체들의 지지 이상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부총리로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늦게까지 오래 끈 이유가 尹德弘 부총리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에 다 합당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尹德弘 부총리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취임하실 때 그 취임사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조금 전에 金貞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취임사의 내용은 제가 소상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어린이가 그 내용을 봤다고 하면, 초등학교 어린이는 마피아라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마피아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피아는 살인, 밀수, 매춘, 마약거래로 돈을 축적하는 범죄의 조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이가 잘못 알고 만약에 자기 선생님께 ‘선생님, 지금 교육부 안에 마피아들의 큰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새로운 교육부총리가 뽕뽕이 돌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교육부를 없애고 살려고 한대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부총리의 취임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 본 위원이 지난 교육부에서 무책임하게 발표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철회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먼저 촛지 이유로 스승의 날을 변경하려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철회되어 버렸습니다. 또 촛지거부교사 인사상 우대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하였고 교원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참스승인증제 시행방침을 발표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또 현실성 없는 학생의 담임선택제를 추진하였으나 교사와 학생들의 반발로 보류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내에서 체벌을 금지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내체벌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때문에 현장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 일선교사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항상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9월 7일 한 시민단체가 주관한 ‘학벌 없는 사회’ 토론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신문에 크게 실리기 때문에 없애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라며 토론의 달인다운 언변으로 예봉을 피해 가면서 서울대 폐지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서울대 공익법인화는 盧武鉉 대통령의 서울대 폐지 언급과 그 맥을 같이 한 것이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朴昌達 委員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대 폐지까지 언급하셨는데 부총리께서는 한국사회의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될 것입니다. 추후에 답변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종보고서에 중단되어야 할 정책, 수정되어야 할 정책, 강화해야 할 정책, 새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등 4개의 소주제로 해서 모두 46개의 항목에 걸쳐서 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朴昌達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교육부하고 일절 협의가 없는 내용이겠네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인수위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昌達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단되어야 할 정책 가운데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과 교육개방문제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부총리님! 인수위 보고자료가 교육부에도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굉장히 두꺼운 자료가 있습니다.

○朴昌達 委員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교육부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玄勝一 위원께서 질의하

신 내용인데 앞으로 교육부에서 각급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교원단체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의 교육감 인사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행한 일과 맥을 같이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압니다.

그럴 때 尹德弘 부총리께서는 교육부에서 입안되고 실행해야 될 정책을 소신껏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교육부총리를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하셔서 대구에서 보고 있는 후배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부총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貞淑 委員 제가 자리를 떠나 되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와 관련된 자료인데 NEIS 현안에 대한 질의, WTO교육개방 관련문제, 전문상담교사 배치 문제를 서면으로 다시 드릴 테니까 자세히 읽어 보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실태조사보고서 그다음에 2000년 1월 기획예산처보고서, BPR 또 2001년 6월 14일 시·도교육청 정보화담당과장회의 그리고 2001년 6월 20일 토론회 설문조사가 있는데 모두 NEIS 관련 자료들입니다. 특히 우리 당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수위 보고서 중에 교육정책부분을 제 방에도 한 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다면 앞으로 5년간 하실 텐데 제가 오늘 부총리의 교육관이랄지 철학 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한마디로 걱정입니다. 다행히 부총리제도가 청문회가 없어서 그렇지, 5년간 하시고 나면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상태가 될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게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금년만 해도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가 약 7000명 부족하거든요. 1만 3000명 정도 필요한데 절반밖에 수급을 못 하고 약 6750명 정도 부족한데 알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金貞淑 委員 그러면 어떻게 메우실 생각이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327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金貞淑 委員 작년까지의 보고에는 6750명 아니었어요? 그런데 3000명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어디서 증원이 됐어요? 숫자를 확인해서 다시 저희 방으로 보내 주세요. 3000명이 아닙니다. 부족한 인원이 더 많습니다.

제가 장관하고 숫자 맞추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총리께서도 취임사에 중등교육 위기라고 하셨고 또 대학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대학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문 닫는 대학이 많고 서울대 학에 수학학력이 미달된 학생이 20%나 된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유아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초·중등, 대학까지 교육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엉망을 가속화 시킨 것은, 공교육을 붕괴시킨 것은 지난 정부에서 교사들에 대한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朴昌達 위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것들이 교사의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 오셔서 일성이 뭐냐 하면 학부모, 학생, 동료 다 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과거 정권에서 공교육이 급속도로 망가져 버린 주요 원인이 되었던 교사들의 교권 확립을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싶은데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시겠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니까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 본계획 수립'에 수능예비평가를 통해서 문제점 사전평가 및 보완을 하겠다, 2003년 12월에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능예비평가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한 번 더 보는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사전 모의고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金貞淑 委員 그러면 2006년부터는 변경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크게 변경이 없을 것입니다.

○金貞淑 委員 수능을 자격고사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과감하게 하셨는데 저는 수능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수능을 복수로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 3회를 봐서 자기가 채택하는 토플처

럼 가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수능난이도를 조절할 능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어떤 나라에 수능난이도 하나도 조절 못 하는 교육부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교육부의 진짜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제도를 2, 3회 복수로 하실 것을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체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일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대학입시를 시험 당일에 감기가 걸릴지, 지각을 할지 모르는데 한 번에 좌우한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2, 3회 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수능난이도는 전문가들에게 시키면 됩니다. 그것 하나 해결 못 하는 나라가 교육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의인데 아까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무엇을 가장 꼽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부총리님의 교육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임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면 조금 더 여쭙고 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떠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교수 임용할 때 1억 원씩, 5000만 원씩 챙기는 재단이사장들을 알고 계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알고 있다가보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金貞淑 委員 어떻게 소문 가지고 장관께서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소문만 가지고 취임사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발언하시고도 교육부총리가 소문이 그렇더라는 식으로 흘려버리면 이 나라의 가치관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알면 교육부총리로서 단호히 척결하셔야지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돌아 다니도록 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무용론 얘기를 하시면서 교육관료들은 시대감각이 뒤떨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지나가는 말들이 그렇더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계시는 동안에 다 바꾸실 겁니까, 아니면 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교육부 직원들이 이미 뽕뽕이를 돌리고 있어요. 장관 답변태도가 이것이 됩니까? 오늘 현안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공부도 안 해 가지고 오고……

교육개방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어디인지,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직원 하나가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장관은 3월 31일까지 마감되는 양허안에 대해서 정보도 전혀 없고 공부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교육부 직원들이 뽕뽕이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6개월 준비하시면 이제 뽕뽕이 돌려서 나가야 돼요. 교육부 직원들을 장악하시든지 아니면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빨리 결심하셔야 됩니다.

5.5.3 학제개편에 대해서 여론수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다음에 50~60가지의 교육과제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이 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야 하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50~60가지의 교육과제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사 다면평가제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아직 답변을 안 하셨는데 마지막에 시간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용지물인 교육부를 없애실 것인지, 교육부 관료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평소에 소신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있으시니까 취임사에서 일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소문들을 불식하고 같이 일을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문맥이 밖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런 소문이 들리느냐, 이제부터 저와 같이 허리띠를 맞잡고 열심히 일을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金貞淑 委員 그런 소문이 있어도 장관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마피아’라는 단어는 옛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의 앞날을 밝게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케케묵은 고장난 녹음기 테이프를 트는 것처럼 구버전을 틀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尹 부총리께서는 서울 사대 출신이예요. 마피아라는 것이 다 그런 것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尹 부총리는 교육부 내의 서울대 사대 출신 파벌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委員長 尹榮卓 金 위원님! 15분 다 쓰셨습니다.

○金貞淑 委員 잠깐만요,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저는尹 부총리의 인격을 아직은 모릅니다. 겉으로 봐었을 때 마음이 좋아 보이는데 교육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추진력 있는, 과단성 있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로 될 때 각 부를 통솔할 만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되는, 예를 들어 노동부나 과학기술부 등 기타 부가 있습니다. 인적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부처를 장악해야 될 전문적이고도 고도의 인격이 겸비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높은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될 부총리께서 오늘 이렇게 준비도 안 해 오시고 직원들에게 휘둘러 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교육부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저는 오늘 어지간하면 기분 좋게 가려고 했는데 오늘 제 심정은 이 나라 교육의 앞날이 너무나 어둡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보완해 주실 것을 상당히 예의 바르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金敬天 위원, 답변은 없는 것이지요?

○金敬天 委員 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NEIS와 WTO 교육개방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인수위 보고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朴昌達 위원님의 방송위원회 건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지요.

○教育人的資源部大學支援局長 張基元 대학지원국장 張基元입니다.

강대인 교수님 건은 오늘자로 건국대학교에서 휴직처리될 예정이고 그 효력은 3월 1일자로 소급처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昌達 委員** 아직까지 처리된 것은 아니고 오늘 방금 전화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教育人的資源部大學支援局長 張基元** 지금 대학 측에 확인했습니다.

○**朴昌達 委員** 그러니까 그 사안이 방금 교육부에 질의하고 문제를 삼으니까 오늘자로 처리되었다는 것입니까?

○**教育人的資源部大學支援局長 張基元**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학 내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오늘 마무리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朴昌達 委員** 그것이 꼭 오늘자로 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명색이 장관급인데 그분이 교수겸 직발령을 받아 있고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니 오늘자로 휴직처리니 면직이니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教育人的資源部大學支援局長 張基元** 아마 대학 측에서는 후임 위원장님 발령관계로 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朴昌達 委員**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자로 처리되었다는 것입니까?

○**教育人的資源部大學支援局長 張基元** 3월 1일자로 소급처리가 됩니다.

○**朴昌達 委員** 알았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다 끝나셨으면 밖의 기자들 때문에 한 건만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예, 그렇게 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까 저 보고 WT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길래 '유보'라는 낱말을 썼는데 유보라고 석간신문에 나가면 앞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초의 양허안 제출 여부에 대해 이제부터 그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유보네 뭐네 하고 신문에 나가 버리면 제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허안 제출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일문일답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李美卿 위원님, 金貞淑 위원님, 李在禎 위원님, 李揆澤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

습니다. 정부 측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유아교육법안,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그리고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확정된 후 각 위원님들에게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신임 부총리에 대해서 기대도 크지만 그만큼 애정과 걱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로서의 소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총리께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이 된 이상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데도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교육정책에 관한 한 태산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사심 없는 협조 속에서 여야의 구분 없이 당리당락을 떠나 운영되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교육을 걱정하는 것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듯이 행정부와 입법부도 다를 수 없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 문제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개혁이 함께 하는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퇴임하셨습니다마는 李相周 전임 부총리가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은 투사가 아니라 페스탈로치'라고 한 말을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出席委員(15人)

權 哲 賢 金 敬 天 金 貞 淑 朴 昌 達
 薛 勳 尹 景 湜 尹 榮 卓 李 揆 澤
 李 美 卿 李 在 五 李 在 禎 鄭 夢 準
 崔 榮 熙 玄 勝 一 黃 祐 呂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尙 元 鍾
 전 문 위 원 鄭 順 泳

○政府側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부 총 리 겸 尹 德 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차 관 徐 凡 錫
 차 관 보 高 在 邦
 기 획 관 리 실 장 李 基 雨
 학 교 정 책 실 장 李 修 一
 인 적 자 원 정 책 국 장 鄭 奉 根
 평 생 직 업 교 육 국 장 金 永 植
 대 학 지 원 국 장 張 基 元
 교 원 자 치 지 원 국 장 金 坪 洙
 공 보 관 柳 宣 圭
 감 사 관 金 洪 鎭
 국 제 교 육 정 보 화 관 金 正 基
 기 획 관
 교 원 정 책 심 의 관 李 英 萬
 비 서 실 장 金 東 玉
 총 무 과 장 李 鍾 洵
 학 교 정 책 기 획 팀 장 鄭 鳳 燮
 국 제 교 육 협 력 당 당 관 金 應 權
 국 제 교 육 협 력 당 당 관 실 朴 株 用
 교 육 행 정 사 무 관

○통지

위원재추천에대한통지

3월11일, 의장으로부터 김화중 위원의 의원 사직으로 인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 자격 상실로 위원 1인을 재추천하여 달라는 통지가 있었음

【報告事項】

○議員辭職

議 員 名	選 舉 區	交 涉 團 體
金花中	比例代表	새천년민주당

(3월4일자)

(3월4일 의장이 허가함)

○常任委員辭任

委 員 名	辭 任 委 員 會	交 涉 團 體
金花中	教 育	새천년민주당

(3월4일자)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 員 名	辭 任 委 員 會	補 任 委 員 會	交 涉 團 體
崔榮熙	保 健 福 祉	教 育	새천년민주당

(3월4일자)